

 COMMENT

(선행정학 100% 적중)

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2018 서울7급 행정학 문제는 가히 지옥과 천당을 오갈 정도로 지난 3월 1차 서울7급 행정학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난이도가 낮았으며 구성상 그리 좋은 출제였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번 서울7급(2차) 행정학은 최근 치러진 다른 행정학 시험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광범위하고 깊이있게 출제는 되었지만 전반적인 체감난이도가 지난 3.24 치러진 1차 7급행정학에 비하여 변별력에 문제가 있을 정도로 난이도가 현저히 낮았고 이번에 함께 치러진 서울9급 행정학개론 문제보다도 난이도가 낮은 평이한 수준이었습니다. 정형화된 기출문제도 상당수 출제되었고 A, B급 주제에서의 출제비율이 높아 전혀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으며 선행정학을 수강한 수험생이라면 무난히 고득점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8의 Adams의 공정성이론의 동기유발전략문제, 문10의 정책승계문제, 문12의 전자정부의 역기능 문제, 문13의 전자정부 발달단계문제가 참신하고 생소한 문제였지만 이들 문제마저도 안타깝게도 변별력이 그리 높지는 않은 문제들이었습니다.

이번 2차 서울7급 행정학은 난이도가 낮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수준의 출제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금물이며 최근 행정학시험은 전반적으로 변별력을 갖추기 위하여 그동안 출제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출제될 수도 있는 경계문제(나올라 말락하는 언저리 부분), 즉 빈출범위를 약간 벗어나면서도 의미있는 새로운 내용들(약간 지엽적이라고 느낄 수도 있는 경계문제)이 출제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나 대비를 전혀 하지 않으면 고득점은 어려워집니다. 물론 시험에 임박해서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핵심적인 것을 정리해야겠지만 평소 심화이론이나 기출수업때는 그런 언저리(가장자리)내용을 다루어주는 완성도 높은 강의를 접하는 것이 고득점의 열쇠라 할 수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이제 금년도 서울7급시험 끝났을 뿐입니다. 모쪼록 잠시 휴식을 취하시면서 결과를 겸허히 기다리시기 바라며 국가직과 지방직 7급이 남아있으니 남은 기간 동안 빠르게 기본이론(심화강좌)을 새롭게 다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중규 -

01 **엽관제의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①

<보기>

- ㄱ. 부정부패를 방지하기가 쉽다.
- ㄴ. 행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쉽다.
- ㄷ. 정부관료제의 민주화에 기여한다.
- ㄹ. 정치적 책임을 확보하기 용이하다.
- ㅁ. 직업공무원제 정착에 도움이 된다.
- ㅂ. 공무원들의 충성심을 확보하기 용이하다.

- ① ㄱ, ㄴ, ㅁ
- ② ㄴ, ㄷ, ㅂ
- ③ ㄷ, ㄹ, ㅁ
- ④ ㄱ, ㄴ, ㄹ

**해설**

① ㄱ, ㄴ, ㅁ만 엽관주의의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ㄱ [×] 위인설관 등으로 비능률과 낭비, 부정부패를 방지하기가 어렵다.
- ㄴ [×] 정권교체시 공직의 대량경질로 행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 ㄷ [○] 선거와 정당을 통해서 정부관료제가 국민에게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한다.
- ㄹ [○] 선거와 정당을 통해서 정부관료제가 국민에게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다.
- ㅁ [×] 공무원의 임기가 정해지고 정권교체 시 신분보장이 되지 않으므로 직업공무원제 정착에 불리하다.
- ㅂ [○] 선출직 정치인에 대한 공무원들의 충성심을 확보하기 용이하다.

**엽관제의 장단점**

장점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정당정치 발달에 기여</li> <li>② 평등이념 구현 - 한정된 공직 널리 개방</li> <li>③ 관료제의 쇄신</li> <li>④ 정치적 리더십 강화</li> <li>⑤ 정책변동에 대응 유리</li> <li>⑥ 정부관료제의 민주화 : 민주성 · 대응성 · 책임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정치적 중립 저해 : 정당의 사병화 - 공익의 저해</li> <li>② 행정의 안정성 저해</li> <li>③ 비능률 · 무질서 · 낭비 · 부패 · 무능</li> <li>④ 임용의 공정성 상실</li> </ul>

**참고**

2018 7급 선행정학 p.469

**02** 현행「국가재정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제도들 중 재정부운용의 건전성 강화 목적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항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④

<보기>

- ㄱ.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도입
- ㄴ. 예산·기금 지출에 대한 국민 감사와 예산성과금 지급
- ㄷ.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제한
- ㄹ. 세계잉여금 일정 비율의 공적자금 등 상환 의무화
- ㅁ. 국가채무관리계획 수립
- ㅂ. 국가 보증채무 부담의 국회 사전 동의
- ㅅ. 국세 감면의 제한
- ㅇ. 재정정보 연 1회 이상 공개 의무화
- ㅈ. 법률안 재정 소요 추계제도
- ㅊ. 예산, 기금 간 여유재원의 상호 전출·입

- ① ㄱ, ㄴ, ㄷ, ㄹ, ㅁ, ㅂ
- ② ㄴ, ㄹ, ㅂ, ㅅ, ㅇ, ㅊ
- ③ ㄴ, ㄷ, ㅁ, ㅅ, ㅇ, ㅊ
- ④ ㄷ, ㄹ, ㅁ, ㅂ, ㅅ, ㅈ

**해설**

④ ㄱ, ㄴ, ㅇ만 재정건정성과 관련이 없다.

- ☑ ㄱ [X]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도입은 재정의 형평성 강화와 관련된 제도이다.
- ㄴ [X] 예산·기금 지출에 대한 국민 감사와 예산성과금 지급은 재정의 투명성 강화와 관련된다.
- ㄷ [O]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제한은 추경예산의 남발로 인한 재정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 ㄹ [O] 세계잉여금 일정 비율의 공적자금 등 상환 의무화는 잉여금을 추경예산 등으로 사용하는 관행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 ㅁ [O] 국가채무관리계획 수립은 국가채무의 팽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 ㅂ [O] 국가 보증채무 부담의 국회 사전 동의는 보증채무행위 남발로 인한 국고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 ㅅ [O] 국세 감면비율을 대통령령 이하가 되도록 제한하는 것은 무분별한 국세 감면을 막고 재정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 ㅇ [X] 재정정보 연 1회 이상 공개 의무화는 재정의 투명성 제고와 관련된다.
- ㅈ [O] 재정부담이 소요되는 법률안을 제출 시 5개년 이상의 소요재원조달계획을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재원확보없는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ㅊ [O] 예산, 기금 간 여유재원의 상호 전출입 허용은 재정부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재정법의 주요내용**

제도	내용	효율	성과	투명	건전	형평
① 국가재정부운용계획의 수립	5회계연도 이상의 계획을 수립,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	○			○	
② 성과중심의 재정부운용	예산요구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제출 의무화	○	○			
③ 주요 재정정보의 공표	매년 1회 이상 공표의무화 ······(구) 예산회계법에도 있었던 규정			○		
④ 회계 및 기금간 여유재원의 신속적인 운용		○				
⑤ 성인지 예결산제도 도입	남녀평등예산 (2010회계연도부터 시행)					○
⑥ 일반예비비의 계상한도 설정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					
⑦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	조세감면 등의 추정금액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 (2011회계연도부터)					○
⑧ 자율편성제도의 도입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출한도를 포함한 예산안편성지침을 3월 31일까지 통보	○				
⑨ 국가채무관리계획의 국회 제출 의무화					○	
⑩ 총사업비관리제도 및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도입						

㉑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현물출자, 외국차관전대 등					
㉒ 결산의 국회 조기 제출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제출					
㉓ 기금운용계획의 자율변경 가능 범위 축소	비금융성기금 30% ⇨ 20% 이내, 금융성기금 50% ⇨ 30% 이내					
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유 의 제한	전쟁·대규모 자연재해(사회재난 포함),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법령상 지출의무 발생					○
㉕ 세계잉여금을 추경에 앞서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사용토록 의무화						○
㉖ 불법 재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제도의 도입					○	
㉗ 국제 감면 한도제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 이하					○
㉘ 국고채무부담행위	국회 사전 동의 필요					○

참고 2018 7급 선행정학 p.592

### 03 성과주의 예산제도(PBS : Performance Budgeting System)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 ① 평가 대상 업무 단위가 중간 산출물인 경우가 많아 예산성과의 질적인 측면까지 평가할 수 있다.
- ② 계량화된 정보를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관리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 ③ 입법부의 예산심의를 간편하게 만든다.
- ④ 사업 또는 활동별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부의 추진사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해설** ① 성과주의 예산은 평가대상 업무단위가 최종 산출물이 아닌 중간 산출물인 경우가 많아 집행성과에 그칠 뿐 정책목표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달성여부를 의미하는 정책성과, 즉 질적인 성과까지는 평가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 ② [○] 업무량이나 단위원가 등 계량화된 정보를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관리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 ③ [○] 사업 중심으로 분류되어 입법부의 예산심의를 간편하게 만든다.
- ④ [○] 사업 또는 활동별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부의 추진사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 성과주의 예산의 장단점

장점	단점
① 내부통제 합리화(행정부 힘 실어주기) ② 입법부 예산심의 용이 ③ 재정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 국민 이해 용이 ④ 장기계획 수립에 유리 ⑤ 합리적·효율적 자원배분	① 의회통제 / 재정통제 곤란 ② 장기 계획과의 연계보다 개별 단위사업 중심 ③ 대안적·합리적 검토 곤란(합리모형×)

참고 2018 7급 선행정학 p.642

## 04 우리나라의 지방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 ① 현재 광역-기초자치단체장 및 광역-기초의회 의원 선거 모두에 정당공천제가 허용되고 있다.
- ② 광역의회의 지역구 선거는 기본적으로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 ③ 기초의회 지역구 선거는 기본적으로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 ④ 소선거구제의 경우에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주민과 의원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해설**

- ① 현재 광역-기초자치단체장 및 광역-기초의회 의원 선거 모두에 정당공천제가 허용되고 있다. 2006년 이전에는 기초의회의원에 대해서는 정당공천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2006년부터 정당공천을 모두 허용하고 있다.
- ② [×] 광역의회의 지역구 선거는 기본적으로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비례대표제를 가미하고 있다.
- ③ [×] 기초의회 지역구 선거는 기본적으로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비례대표제를 가미하고 있다.
- ④ [×] 소선거구제는 선거구를 작게 하여 최다득표자 1인을 선출하는 다수대표제 방식이므로 관할구역이 작아 풀뿌리 민주주의에 입각하여 주민과 의원과의 관계가 긴밀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 지방선거제도**

		선거구제	비례대표	정당공천
단체장	광역/기초	소선거구제(1인)	-	○
의원	광역의회	소선거구제(1인)	○	○
	기초의회	중선거구제(2~4인)	○	○
교육감	광역단체	소선거구제(1인)	-	×

**참고**

2018 7급 선행정학 p.847

05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③

<보기>

- ㄱ. 효과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능률성의 희생이 발생될 수 있다.
- ㄴ. 민주성은 국민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정부 관료제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의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된다.
- ㄷ. 절차적 합리성은 목표에 비추어 적합한 행동이 선택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 ㄹ. 투명성은 정보공개뿐만 아니라 정보에 대한 접근권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 ㅁ. 제도적 책임성은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책임을 의미한다.

- ① ㄱ, ㄷ, ㅁ
- ② ㄴ, ㄷ, ㅁ
- ③ ㄱ, ㄴ, ㄹ
- ④ ㄴ, ㄷ, ㄹ

**해설**

③ ㄱ, ㄴ, ㄹ만 옳다.

- ☑ ㄱ [o] 효과성은 목표달성도이고 능률성은 효과산출의 비율을 의미하는 수단적 이념이므로 추구과정에서 양자는 상충될 수 있다.
- ㄴ [o] 대외적 민주성은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고 대내적 민주성은 관료제 내부의 의사결정과정에 공무원을 참여시키는 것이다.
- ㄷ [x] 절차적 합리성이 아니라 내용적 합리성을 의미한다(H.A.Simon).
- ㄹ [o] 투명성의 핵심은 국민에 대한 정보공개 및 접근성 보장이다.
- ㅁ [x]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책임은 제도적 책임이 아닌 비제도적 책임을 의미한다.

**행정이념의 변천**

이념	개념	행정이론
합법성	법률적합성	관료제이론
능률성	산출/투입	행정관리설
민주성	국민을 위한 행정	통치기능설
합리성	목표에 대한 수단의 적합성	행태론
효과성	목표달성도	발전행정론
형평성	소외계층 위주의 행정	신행정론
생산성	능률성 + 효과성	신공공관리론
신뢰성	정부에 대한 국민의 믿음	뉴거버넌스

**참고**

2018 7급 선행정학 p.81

06 오스본(Osborne)과 개블러(Gaebler)가 제시한 기업가적 정부 운영의 원리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2

<보기>

- ㄱ. 투입, 과정, 성과를 균형 있게 연계한 예산 배분
- ㄴ. 권한 분산과 하부 위임을 통한 참여적 의사결정 촉진
- ㄷ. 서비스 공급자로서의 정부관료제 역할 강화
- ㄹ. 공공서비스 제공에 경쟁 원리를 도입
- ㅁ. 목표와 임무 중심의 조직 운영
- ㅂ. 문제에 대한 사후수습 역량의 강화

- ① ㄱ, ㄴ, ㅂ
- ② ㄴ, ㄹ, ㅁ
- ③ ㄴ, ㄷ, ㄹ, ㅁ
- ④ ㄱ, ㄷ, ㄹ, ㅂ

**해설**

② ㄴ, ㄹ, ㅁ만 옳다.

- ㄱ [×] 투입이나 과정이 아닌 성과중심의 관리를 중시한다.
- ㄴ [○] 기업형 정부는 관리자에 대한 재량권을 확대하고 의사결정에의 참여를 강조한다.
- ㄷ [×] 서비스의 직접적 공급자로서의 정부가 아닌 방향잡기나 촉매자로서의 관료제 역할을 강조한다.
- ㄹ [○] 공공서비스 제공에 경쟁 원리와 시장원리를 도입하고자 한다.
- ㅁ [○] 규칙이나 절차보다는 목표나 임무 중심의 조직 운영을 중시한다.
- ㅂ [×] 문제에 대한 사후수습보다는 사전예방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기업형 정부의 10대 원리**

전통적 관료제		기업형 정부(NPM)	10대 원리
노젓기(rowing)	⇒	방향키(steering) 역할	촉매적 정부
직접해줌(service)	⇒	할 수 있도록 함 (empowering)	시민소유정부
독점 공급	⇒	경쟁 도입	경쟁적 정부
규칙중심 관리	⇒	임무중심 관리	임무지향 정부
투입중심	⇒	성과중심	결과지향 정부
관료중심	⇒	고객중심	고객지향 정부
지출지향(지출절감)	⇒	수익창출	기업가 정신
사후치료	⇒	예측과 예방	예견적 정부
집권적 계층제(명령과 통제)	⇒	참여와 팀워크(협업과 네트워크 형성)	분권화된 정부
행정메커니즘	⇒	시장메커니즘	시장지향 정부

**참고**

2018 7급 선행정학 p.168

**07** 막스 베버(Max Weber)가 말하는 관료제의 이념형(ideal typ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②

- ① 조직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순환근무를 강조한다.
- ② 법적/합리적 권위에 근거한 조직구조이다.
- ③ 도덕적 이상을 지닌 관료제의 형태를 말한다.
- ④ 문서화된 법규집보다 전문직업적 판단을 강조한다.

**해설**

② 막스 베버(Max Weber)의 관료제 이념형(ideal type)은 권위의 3가지 유형(전통적 권위, 카리스마적 권위, 합법적 권위) 중 법적/합리적 권위에 근거한 조직구조이다.

- ① [×] 이념형 관료제는 조직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순환근무보다는 한 가지 일만 반복적·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엄격한 분업의 원리를 중시한다.
- ③ [×] 이념형 관료제는 도덕적 이상이나 모범보다는 다양한 현실세계의 일정부분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된 모델(모형) 같은 개념이다.
- ④ [×] 전문직업적 판단보다는 문서화된 법규정에 근거한 객관적 행정을 강조한다.

**근대관료제의 특징**

특징	병리
① 계층제	① 민주성·대표성 제약
② 법 앞의 평등	② 동조과잉(목표 전환)
③ 문서주의	③ 번문욕례
④ 공·사 분리	④ 인격 상실
⑤ 전문지식(실적관료제)	⑤ 전문가적 무능
⑥ 전임직(직업관료제)	⑥ 할거주의
⑦ 비개인화(impersonalism)	⑦ 변동에 대한 저항
	⑧ 독선주의, 기밀주의
	⑨ 피터의 원리

**참고**

2018 7급 선행정학 p.381

**08** 공정성(형평성) 이론에서 자신(A)과 준거인물(B)을 비교하여 보상이 불공정하다고 느낄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자신(A)의 전략적 대응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②

- ①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
- ② 준거인물(B)의 업무 방식을 참고하여 배움점을 찾는다.
- ③ 준거인물(B)이 자신(A)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일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바꾼다.
- ④ 다른 비교대상을 찾는다.

**해설**

② 설문은 아담스(Adams)의 공정성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공정성 이론에서는 자신과 준거인을 비교하여 보상이 불공정하다고 느낄 때 그 불공평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한다는 이론이다. 불일치를 제거하는 행동 방식에는 투입의 변경, 산출의 변경, 투입과 지각에 대한 산출변경, 준거인물의 변경 등이 있는데 ②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준거인물을 변경하는 경우는 있지만 준거인물의 행동방식을 배우거나 하지는 않는다.

- ① [○] 불공평을 제거하기 위한 투입(노력)의 변경에 해당한다.
- ③ [○] 불공평을 제거하기 위한 투입이나 산출에 대한 지각 변경에 해당한다.
- ④ [○] 불공평을 제거하기 위한 준거인물의 변경에 해당한다.

**참고**

2018 7급 선행정학 p.337

## 09 드로어(Dror)의 최적모형(optimal model)에서 말하는 메타정책결정(metapolicy making)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③

- ① 정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정책평가를 위한 정책결정'을 의미한다.
- ② 정책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정책집행을 위한 정책결정'을 의미한다.
- ③ 정책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정책결정을 위한 정책결정'을 의미한다.
- ④ 정책을 어떻게 종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정책종결을 위한 정책결정'을 의미한다.

**해설**

③ 드로어(Dror)는 최적모형에서 정책결정의 단계를 3단계(상위정책결정, 본래의미의 결정, 후정책결정)으로 나누고 이들 단계가 서로 환류되는 것이 정책의 최적성과를 가져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이 중 상위정책(메타 정책)의 결정이란 정책결정을 어떻게 할 것 인지 정책결정을 위한 전략이나 체제를 결정하는 근원적인 정책결정을 말한다.

☑ ①②④ [×] 모두 상위정책결정이 아닌 정책결정 이후의 결정(Post policy making stage)에 해당한다.

### 📌 드로어의 최적모형 단계



**참고** 2018 7급 선행정책학 p.257

## 10 정책승계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②

- ① 선형승계 : 새로운 정책이 과거의 정책을 대체하여 양자의 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정책승계
- ② 부분적 종결 : 하나의 정책이 다수의 새로운 정책으로 분할되는 형태의 정책승계
- ③ 정책통합 : 같은 분야의 정책이 합하여짐으로써 새로운 정책이 나타나는 형태의 정책승계
- ④ 우발적 승계 : 타 분야의 정책변동에 연계하여 우발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형태의 정책승계

**해설**

② ②는 부분적 종결이 아니라 정책분할에 해당하는 정책승계유형이다. 부분적 종결이란 일부정책을 유지하면서 일부는 완전히 폐지하는 정책승계를 말한다.

### 📌 정책승계의 유형

정책대체	정책목표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책내용을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것
부분종결	일부의 정책을 유지하면서 일부는 완전히 폐지하는 것(정책유지+정책종결)
복합적 정책승계	정책유지, 정책대체, 정책종결 또는 정책추가 등 3개 이상의 정책승계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
우발적 정책승계	타 분야의 정책변동에 연계하여 우발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형태의 정책승계(부수적, 파생적 승계)
정책통합	유사한 목표를 가진 2개의 정책이 하나의 정책으로 통합되는 것
정책분할	정책담당기관의 분리 등으로 하나의 정책이 두 개 이상으로 분리되는 것

**참고** 2018 7급 선행정책학 p.308

# 11 <보기> 이론의 내용과 잘 부합하는 조직관리 전략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②»

<보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일을 싫어하며 가능하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또한 안전을 원하고 변화에 저항적이다.

- ① 정확한 업무지시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 ② 의사결정 시 부하직원을 참여시키고 권한을 확대해서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 ③ 업무 평가 결과에 따른 엄격한 상벌의 원칙을 제시한다.
- ④ 관리자가 조직구성원에게 적절한 업무량을 부과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해설**

② 보기의 내용은 맥그리거의 XY이론 중 X이론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따라서 X이론과 관련된 전략은 감독강화(①), 상벌의 원칙(③) 및 과업량의 적절한 분담(④) 등이 해당한다.

② [X] 의사결정의 부하들의 참여와 자율권 확대는 Y이론의 관리전략에 해당한다.

**맥그리거의 XY이론**

	X 이론	Y 이론
인간관	① 사람의 본성은 본디 일을 싫어하고 게으르며 외적 강제나 명령에 피동적으로 따를 뿐이다. ② 대중의 범용성(평범성)을 전제한다. ③ 사람은 안전을 원하고 변화에는 저항적이다. ④ 사람은 본래 자기중심적이고 조직의 필요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① 일을 놀이(휴식)처럼 생각하고 일을 위해 정신적·육체적 노력을 바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② 자율적으로 자기규제를 할 수 있다. ③ 존경과 긍지에 대한 욕구와 자기실현욕구를 가지고 있다. ④ 적절한 조건만 갖추어지면 책임을 받아들인다. ⑤ 비교적 높은 수준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한다.
관리전략	사탕(부드러운 관리)과 채찍(강경한 관리) ① 강경한 접근 : 강제와 위협, 면밀한 감독, 엄격한 통제, 상부책임, 권위적 리더십, 상벌 ② 부드러운 접근 : 경제적 보상 등 하위욕구 충족, 대인관계의 개선	① 통합의 원리 : 개인의 목적과 조직의 목적을 통합시키는 분권적이고 민주적인 관리 ② 사람들의 자율적 행동과 참여, 자기규제, 자기평가 중시(MBO 등)

**참고**

2018 7급 선행정학 p.332

## 12 전자정부의 역기능에 해당하는 내용과 그 요인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④

<보기>

- ㄱ. 인포데믹스(infordemics)
- ㄴ. 집단극화(group polarization)
- ㄷ. 선택적 정보접촉(selective exposure to information)
- ㄹ. 정보격차(digital divide)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ㄹ
- ④ ㄱ, ㄴ, ㄷ, ㄹ

**해설**

④ ㄱ, ㄴ, ㄷ, ㄹ은 모두 전자정부의 역기능에 해당한다.

- ☑ ㄱ [오] 인포데믹스(infordemics)란 정보(information)와 전염병(epidemics)의 합성어로, 정보 확산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추측이나 뜬소문이 덧붙여진 부정확한 정보가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통해 전염병처럼 빠르게 전파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 경제, 정치, 안보 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 ㄴ [오] 집단극화(group polarization)란 집단의 의사결정이 개인의 의사결정보다 더 극단적인 방향으로 이행하는 현상인데 인터넷 공간에서는 정치적·이기적 극단주의자들에 의하여 네티즌들이 쉽게 동원·조작됨으로써 집단극화의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 ㄷ [오] 선택적 정보접촉(selective exposure to information)이란 정보의 범람 속에서 유리한 정보만을 선별적으로 취하는 행태를 말한다.
- ㄹ [오] 정보격차(digital divide)란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에 정보접근능력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혜택의 격차를 의미한다.

### ☞ 전자정부의 역기능

인포데믹스	근거없는 정보의 유통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등 불건전 사이버 문화가 형성되는 것
집단극화	인터넷 공간에서 발생하는 집단적 동조현상
선택적 정보접촉	유리한 정보만 선별적으로 흡수 또는 배포
정보격차	정보접근능력 차이로 인한 혜택 격차(디지털 디바이드)

**참고**

2018 7급 선행정학 p.747

### 13 전자정부의 발전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②

- ① 우리나라의 나라장터(G2B)는 2002년 개설된 범정부적 전자조달사업으로서 입찰공고 및 조달정보 제공, 제안서 제출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다.
- ② 미국의 'challenge.gov' 프로그램은 국민을 프로슈머 협력자로 보기보다는 정부 정책을 홍보해야 할 대상으로 여긴다.
- ③ 정부의 '국민신문고'나 서울시의 '천만상상 오아시스' 시스템은 참여형 전자거버넌스의 예이다.
- ④ 공동생산형 전자정부 단계에서는 정부와 국민이 공동 생산자로 등장하기 때문에 GNC(Government and Citizen)로 약칭된다.

**해설**

- ② 전자정부에서는 국민이 정부정책의 홍보대상이나 홍보객체, 소비자뿐만 아니라 정보를 생산도 하고 소비도 하는 생산소비자(프로슈머)가 되게 된다. 미국의 'challenge.gov' 프로그램(2010)은 정부 혼자 해결하기 힘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민의 아이디어를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토론과 검증을 통해 채택된 제안자에게 상금을 주는 방식으로 국민을 협력자로 보려는 전자정부운동을 말한다.
- ☑ ① [○] 나라장터(G2B)는 2002년 조달청이 구축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말한다.
- ③ [○] 국민신문고(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공정하지 않은 정책으로 인한 권리·이익의 침해, 불편·불만사항이 있을 때경우합리한 제도나 관행 등의 고발, 행정기관의 각종 정책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온라인상 민원창구)나 천만상상 오아시스 시스템(서울시민의 상상과 제안을 정책으로 승화·실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가 2006년 도입한 온라인 시민제안창구)은 대표적인 참여형 전자거버넌스의 예이다.
- ④ [○] 공동생산형 전자정부 단계에서는 정부와 국민이 공동 생산자로 등장하기 때문에 GNC(Government and Citizen)로 약칭된다.

**참고**

2018 7급 선행정학 p.747

## 14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에 대한 비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 ① 유인기제가 지나치게 다양하여 공공부문 성과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 ② 민영화에 따른 정부 역할의 약화로 인해 행정의 책임성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 ③ 국민은 단지 소비자인 고객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존재이다.
- ④ 정부와 기업 간의 근본적인 환경 차이를 무시하고 정부 부문에 시장기제를 적용하고 있다.

**해설**

- ① 신공공관리론은 유인기제가 지나치게 시장원리나 경쟁원리 등에 입각한 화폐적·금전적 유인에만 치우쳐 있어서 비경제적 측면까지 균형있게 고려해야 하는 공공부문의 성과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최근 공공 부문에 도입되어 각광받고 있는 균형성과관리(BSC)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관리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 ☑ ② [오] 공공무문의 축소와 정부 역할의 약화로 인해 행정의 책임성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 ③ [오] 국민은 단지 소비자인 고객(객체)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체적 존재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 ④ [오] 정부와 기업 간의 근본적인 환경 차이를 도외하고 정부 부문에 무분별하게 시장기제를 적용하려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 NPM과 거버넌스의 비교

구분	신공공관리(국정관리)	뉴거버넌스(신국정관리)
인식론	신자유주의·신공공관리	공동체주의·참여주의·민주주의
관리기구(공급주체)	시장주의	서비스연계망(공동체)에 의한 공동생산
관리가치	결과(효율성, 생산성)	과정(민주성, 정치성)
관료역할	공공기업가	조정자
작동원리	갈등과 경쟁(시장메커니즘)	신뢰와 협력체제(참여메커니즘)
서비스	민영화, 민간위탁	공동생산(시민·기업의 참여)
관리방식	고객지향	임무중심
분석수준	조직내	조직간
이데올로기	우파	좌파
혁신의 초점	정부재창조(미국)	시민재창조(영국)
참여의 형태	자원봉사주의	시민주의(Civicism)
정치성	탈정치화	재정치화

**참고**

2018 7급 선행정학 p.170

## 15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③

- ① 사회구성원들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의 조건 또는 특성을 의미한다.
- ② 공동이익을 위한 상호 조정과 협력을 촉진한다.
- ③ 공동체에 대한 무조건적인 봉사를 전제로 한다.
- ④ 신뢰가 사회 전체 혹은 사회의 특정 부분에 널리 퍼져 있는데서 생기는 능력을 의미하기도 한다.

**해설**

- ③ 사회적 자본은 구성원들이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사회적 조건이나 특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동체 정신이나 호혜주의 규범을 본질로 한다. 따라서 이기주의와도 대조를 이루지만 무조건적인 무료 봉사나 이타주의를 전제로 하지도 않는다.

### ☞ 사회적 자본의 특성

- ① 자발적 네트워크 - 수평적 · 협력적 · 가변적 · 상향적
- ② 호혜주의 - 이기주의적인 것이 아님
- ③ 상호신뢰 : 집단행동의 딜레마 극복
- ④ 친사회적 사회규범
- ⑤ 공동체주의
- ⑥ 정치 · 경제발전의 윤리적 기반
- ⑦ 국력과 국가경쟁력의 실제

**참고**

2018 7급 선행정학 p.33

## 16 현행「국가재정법」에 의한 우리나라 예산편성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④

- ①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신규 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예산안편성지침을 4월 30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 ③ 중앙관서의 장은 6월 30일까지 예산요구서에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다.
- ④ 행정부 예산안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해설**

- ④ 행정부 예산안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종래에는 헌법과 마찬가지로 90일 전까지였으나 2014년 국가재정법의 개정으로 120일 전까지로 앞당겨졌다.

- ① [×] 1.31까지
- ② [×] 3.31까지
- ③ [×] 5.31까지이다. 예산요구서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며,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지는 않는다.

### ☞ 우리나라의 예산과정(국가재정법)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편성지침 시달	3월 31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산요구서 제출	5월 31일까지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의 제출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의 예산 심의 완료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참고**

2018 7급 선행정학 p.666

17 조직구조의 상황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②

<보기>

- ㄱ. 비일상적 기술일 경우 공식화가 높아진 것이다.
- ㄴ. 조직 규모가 커짐에 따라 공식화가 높아질 것이다.
- ㄷ.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집권화가 높아질 것이다.
- ㄹ. 비일상적 기술일수록 집권화가 낮아질 것이다.
- ㅁ.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공식화가 낮아질 것이다.

- ① ㄱ, ㄷ, ㄹ
- ② ㄴ, ㄹ, ㅁ
- ③ ㄷ, ㄹ, ㅁ
- ④ ㄱ, ㄴ, ㅁ

**해설**

② ㄴ, ㄹ, ㅁ만 옳다.

- ㄱ [×] 비일상적 기술일 경우 공식화가 낮아진다.
- ㄴ [○] 조직 규모가 커지면 구성원의 수와 업무량이 늘어나므로 공식화가 높아진다.
- ㄷ [×]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집권화가 낮아진다.
- ㄹ [○] 비일상적 기술일수록 분권화가 높아진다.
- ㅁ [○]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매뉴얼에 의존할 수 없으므로 공식화가 낮아진다.

**조직구조 변수 간 관계**

	규모	기술(일상적)	환경(불확실)
복잡성	+	-	-
공식성	+	+	-
집권성	-	+	-

**참고**

2018 7급 선행정학 p.372

**18** 규제의 대상에 따라 정부규제를 수단규제, 성과규제, 관리규제로 분류할 때 <보기>의 각 유형별 대표 사례와 특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④»

<보기>

구분	규제 사례	규제의 특징
㉠ 수단규제	㉠ 개발 신약에 대한 허용 가능한 부작용 발생 수준 규제	① 과정규제
㉡ 성과규제	㉡ 작업장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장비 착용 규제	② 투입규제
㉢ 관리규제	㉢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규제	③ 산출규제

- |         |       |       |
|---------|-------|-------|
| ㉠       | ㉡     | ㉢     |
| ① a - ① | b - ② | c - ③ |
| ② a - ② | c - ① | b - ③ |
| ③ b - ③ | c - ② | a - ① |
| ④ b - ② | a - ③ | c - ① |

**해설**

④ 규제의 대상에 따라 규제를 구분하면 수단규제, 관리규제, 성과규제로 구분된다. 규제의 유형별 사례와 특징이 옳게 연결된 것은 ④이다. 즉 ㉠의 수단규제는 사례 중에서 ㉡ 작업장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장비 착용 규제에 해당하며 이는 ② 투입(원료나 기술, 장비 등에 대한 규제)에 해당한다.

**규제 유형별 사례와 특징(옳게 연결된 사례)**

구분	규제 사례	규제의 특징
㉠ 수단규제	㉡ 작업장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장비 착용 규제	② 투입규제
㉡ 성과규제	㉠ 개발 신약에 대한 허용 가능한 부작용 발생 수준 규제	③ 산출규제
㉢ 관리규제	㉢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규제	① 과정규제

**참고**

2018 7급 선행정학 p.59

19 공공서비스를 소비의 배제성과 경합성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보기 1>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영역에 해당하는 공공서비스의 명칭과 사례를 <보기 2>에서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보기 1>

	소비의 경합성	경합적	비경합적
소비의 배제성			
배제 가능		가	나
배제 불가능		다	라

<보기 2>

구분	명칭	사례
가	㉠ 공유재	㉡ 전기, 통신, 상하수도
나	㉢ 공공재	㉣ 음식점, 호텔, 의료, 택시
다	㉤ 시장재	㉥ 소방, 치안, 국방, 공기
라	㉦ 요금재	㉧ 지하수, 해저광물, 강, 호수

- |   |       |       |       |       |
|---|-------|-------|-------|-------|
|   | 가     | 나     | 다     | 라     |
| ① | ㉤ - ㉢ | ㉦ - ㉡ | ㉠ - ㉧ | ㉢ - ㉣ |
| ② | ㉤ - ㉡ | ㉠ - ㉢ | ㉦ - ㉣ | ㉢ - ㉧ |
| ③ | ㉦ - ㉡ | ㉤ - ㉧ | ㉢ - ㉣ | ㉠ - ㉣ |
| ④ | ㉢ - ㉧ | ㉠ - ㉣ | ㉤ - ㉢ | ㉦ - ㉡ |

해설

① 옳게 연결된 것은 ①이다. 가는 사적재, 나는 유료재, 다는 공유재, 라는 공공재에 각각 해당한다. 다만 ㉣의 경우 공기는 비극(오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공유재로 보지만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을 띠지 않기 때문에 공공재로 보는 시각도 있다(2018 기출문제 선행정학 및 핵단기 선행정학 p.7 주석).

재화의 유형

	소비의 경합성	경합적	비경합적
소비의 배제성			
배제 가능		사적재	유료재
배제 불가능		공유재	공공재

재화의 유형(E. Savas)



참고

2018 7급 선행정학 p.8

## 20 옴부즈만(Ombudsman)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③

- ① 옴부즈만은 스웨덴어로 대리자·대표자를 의미한다.
- ② 영국과 미국에서는 민정관 또는 호민관이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 ③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에 출범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옴부즈만 제도의 시초이다.
- ④ 통상적으로 옴부즈만은 의회나 정부에 의해 임명되며, 임명하는 기관으로부터 직무상 엄격히 독립되어 국정을 통제한다.

**해설**

- ③ 우리나라의 옴부즈만 제도는 김대중 정부 시절(2002년) 제정된 부패방지법에 의한 부패방지위원회가 시초이다. 그후 부패방지위원회는 국가청렴위원회로 한때 개칭되었다가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위원회 통폐합방침에 따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등과 합쳐져 지금의 국민권익위원회가 되었다.

### 옴부즈만의 특징

- ① 의회 소속
- ② 불법행위(합법성)는 물론 부당행위(합목적성)도 대상
- ③ 간접적 통제 : 무효·취소 불가
- ④ 직권에 의한 조사
- ⑤ 신속한 처리와 저렴한 비용 : 절차는 비공식적, 조사는 공개적
- ⑥ 독립된 헌법기관 : 입법부나 사법부도 통제의 대상

**참고**

2018 7급 선행정학 p.713